



10년을 내다보는 ESCO 활성화 방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의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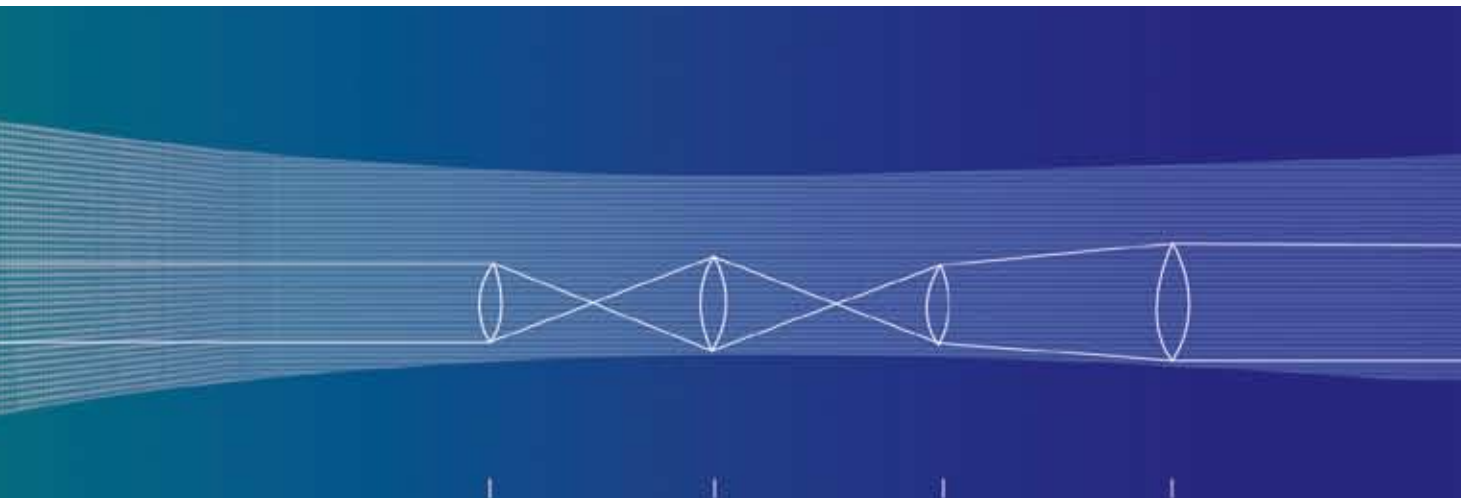
2009년 11월 2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 ESCO간담회에서 ESCO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열풍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초점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ESCO산업의 수요확대가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글 고근환(ESCO 협회 사무국장)

2009년 11월 2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 ESCO 간담회에서 ESCO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열풍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초점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ESCO 산업의 수요확대가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30년까지 50%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표로 개선의지를 발표하였고('09.3) 일본은 ESCO 확산 및 육성, 건물 및 제품의 효율향상 등을 통한 원단위 30%개선을 목표로 '신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였다. EU 또한 '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1차에너지 20% 절감 등 에너지효율실행계획 등을 통하여 포괄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녹색성장과 기후변화가 세기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에너지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조금 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ESCO 시장의 시장규모는 약 7조2,000억 원 정도이며 업체 수는 350여 개나 되지만 '06년의 경우 8개 ESCO가 전체시장의 79%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1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업체는 약 5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시장규모는 약 9,000억 원 정도로 조사되어 있으며, '06년 기준 협회가입 ESCO는 212개이나, 이 중 약 20개 정도가 주로 활동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ESCO 사업에 대한 특별한 정부지원제도가 없어서 주로 Project Financing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장규모는 8,300억 원 정도이며, 주로 활동하는 업체는 약 30여 개 정도로 투자비 조달은 정부보조금 제도와 민간금융제도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기존 주된 시장은 병원·호텔·사무실 등이었으나 점차 지자체



등 공공부문으로 시장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ESCO 사업이 '92년 도입된 이후 연간 2,000억 원 내외의 시장규모로 발전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ESC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93년부터 '08년까지 3,058건의 ESCO 투자사업에 11,603억 원을 지원하였다. 자금정책 지원 추이를 보면 '98년 이전에는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되었으나, '06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ESCO사업의 초기단계('93~'97년)까지는 열병합발전설비와 건물분야의 조명설비에 국한되었으나 '98년부터는 공정개선·폐열회수·냉·난방설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1억 원 지원 시 연 38백만 원(97toe)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2.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성과배분계약방식의 경우, ESCO 기업과 대상사업장이 성과를 배분하게 되므로 ESCO 기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5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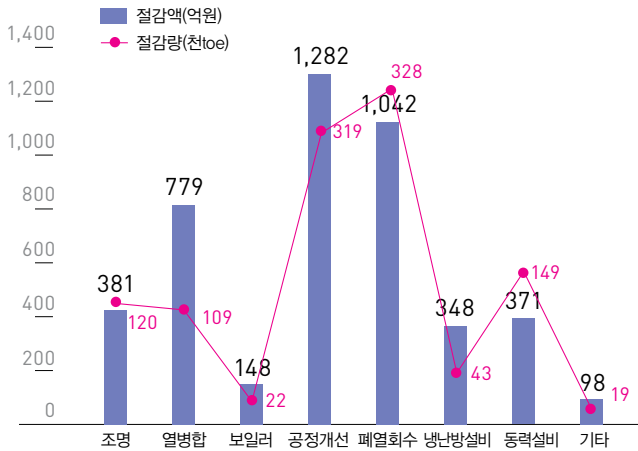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 및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라는 한계로 인해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등의 문제점을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의 낮은 기술력과 인력문제는 ESCO 시장규모 확대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정책자금의 저금리(3.0%)에 익숙해진 ESCO 업체 및 에너지수요자는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주로 정책자금에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08년 전체 ESCO 투자금액 1,490억 원 중 약 75%가 정책자금으로 ESCO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낮은 에너지요금과 높은 금리로 인한 낮은 투자수익률도 민간 투자자의 자발적인 참여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굳이 ESCO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기업들은 자발적 협약(VA)을 통해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업공정 등 기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는 외부 ESCO 기업의 참여에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게다가 ESCO 사업의 뼈대가 되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 높은 수준의 에너지진단기술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수

〈정책자금 지원 추이〉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지원금액 (억 원)	대기업	1,407	389	845	434	624	1,004	434	414	464	6,015
	중소기업	577	362	554	569	207	825	899	943	652	5,588
	중소기업 비율	29.1	48.2	39.6	56.7	24.9	45.1	67.4	71.1	58.4	48.2

(연도별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실적 및 효과('93~'08))

구분	'93~'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투자금액(억 원)	1,984	751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115	11,603
절감금액(억 원)	742	293	602	380	300	574	602	441	514	4,447
절감량(천toe)	234	88	192	102	74	112	133	94	82	1,112



행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고객인 에너지소비기업(대기업)에 비하여 중소 ESCO의 기술력은 열등한 경우가 많은 것도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를 감축하는 것으로 개도국 중 최대 수준이다. ESCO 사업으로 에너지가 절감되면 온실가스 감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에 ESCO와 온실가스감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정책적으로 ESCO 사업이 활성화됨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ESCO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격기능 합리화, 절약시장 창출, 수요·공급 활성화, 절약산업화의 촉진을 통하여 ESCO 시장규모를 '08년 1,625억 원에서 '20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ESCO 업체를 한국에 유치하며 연간 에너지소비를 '08년 82toe에서 '20년 50만toe로 상당 절감하는 것과 ESCO를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번 ESCO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는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첫째, 공공부문 주도로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기존 민간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ESCO 사업형태를 공공기관 소비총량제 실시로 공공부문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의 확대를 유도한다. 건축 연 면적이 1만㎡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09년 현재 800개)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에너지소비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토록 의무화한다고 한다. 더욱이 정부중앙청사는 최근 2년 평균소비량에서 3% 추가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각 기관별로 에너지사용량 측정을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여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실태와 절감실적을 순위로 발표하는 공시제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 매년 우수·미흡기관을 공표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둘째, 민간자금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ESCO 사업은 정책자금 위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나 대기업의 ESCO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지원도 270억 원에서 VA수준인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기업이 중소 ESCO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자금을 조달할 경우,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ESCO 등록기업 정비를 통한 ESCO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대기업들의 ESCO 사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ESCO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ESCO 투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ESCO 사업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용자를 현재 1,350억 원 규모에서 '13년 2,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하였으며 ESCO 사업의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용자 금리도 현행 국고채 1.25%에서 1.5%로 0.25% 인하할 예정이다. 그동안 열설비와 전기설비의 ESCO 용자기간이 달라 상환에 많은 불편사항을 안고 있었던 문제도 두 설비가 서로 동일하게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뀌게 되어 보다 활발한 ESCO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셋째, ESCO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ESCO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분야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서 ESCO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사업에서 CO₂저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범위를 기존 건물에서 신축 건물로 확대하는 등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제한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ESCO 시장의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1만toe 이상 대형건물 중 ESCO 사업 참여 사업장은 한시적(3년)으로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방안을 검토하고 에너지사용실적 신고·에너지 관리자 지정·에너지 의무진단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에너지 사용자들의 ESCO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그 방안이다. 아울러 가점평가 시 ESCO 경험여부를 반영하여 사업자 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계의견 수렴 후 '10년 고시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 기술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인프라 강화이다. 정부는 국내 우수한 에너지자원분야 인력양성센터를 활용하여 에너지진단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중·장기 ESCO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교육하여 기술력과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많은 중소 ESCO 업체들이 안고 있던 전문 인력과 기술력 배양에 관하여 기술수준 제고 및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9월 열리는 에너지대전에서 수여하는 우수 ESCO 시상에 관해서도 인센티브를 현행 5%에서 10%로 추가 지원하게 되어 보다 많은 ESCO의 사업의지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ESCO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제 4차 Asia

ESCO Conference'는 국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하여 ESCO 협회는 다국적 ESCO와 국내 ESCO의 연결고리가 되어 ESCO를 위한 정보 교류와 협력관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9년에는 미국 ESCO 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일본·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국내 ESCO의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등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빠른 세상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ESCO 사업이 비단 우리나라의 시장 확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및 국제협력의 강화, 우리나라의 ESCO 산업을 알리고 에너지절약 기술,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효율 관련 유망 수출 분야를 발굴한다면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신흥 에너지절약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ESCO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 민간 주도의 ESCO 사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선화하고 있는 점은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분명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도 여러 일반분야에서는 ESCO를 많이 생소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야 할 길도 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ESCO CEO의 의식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SCO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 외에도 ESCO 기업만의 자체기술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때 개별 기업의 발전을 넘어서 전체적인 ESCO 업계 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책적으로 이 ESCO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ESCO 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ESCO들에게 크나큰 기회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옛말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했던가. 누구든지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에너지절약에 관한 관심은 뒷전에 미뤄뒀었다. 이제 더 이상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왔다. 단순히 ESCO가 에너지절약사업만이 아닌 친환경 사업,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거듭나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 정부, ESCO가 삼위일체가 되어 ESCO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때이다.